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지급기준 통일하라”	1
강원도민일보	03면	시도의회의장협 참전유공자 수당 통일 촉구	2
연합뉴스		시도의장협의회 '지역별 천차만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	3
강원도민일보	01면	ESG 실천, 폐광지역을 '신에너지역'으로	4
강원도민일보	01면	전국 곳곳 메가시티 광풍 강원특자도 전략 흔들리나	5
江原日報	03면	"파견 공무원 8일만에 도청 복귀… 道 인사 신중해야"	6
KBS 춘천	온라인	이승진 강원도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평가해야”	7
중부뉴스통	온라인	이승진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	8
강원도민일보	03면	"신경호 지지단체 지급 보조금 철저 환수해야"	9
중부뉴스통	온라인	조성운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 지적	10
亞洲經濟	온라인	김기하 의원 "도내 교육지원청 별 화재·지진 대피 훈련 태...	11
신한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도내 교육지원청 별 화...	12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엄기호 강원도의원, "교육청,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적극 ...	13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교육청 농공단지 입주업...	14
연합뉴스		강원 3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 유통 12건 적발..."단속 강화...	15
문화매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	16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에서 면세유 부정 사용 12건 적발	17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18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문화재단 직원 이직 심각, 처우 개선해야	18
KBS 춘천	온라인	‘개청 100일’ 강원 글로벌본부 “현안사업 실질 성과 주력”	19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용래 도의원(강릉)	2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김용래 도의원	20
江原日報	07면	"중기 협동조합 활성화 지자체가 나서야"	21
江原日報	01면	세수 부족한데 ... 설상가상 악성 체납 517억	22
江原日報	02면	도내 고액 상습 체납 1,113명	22
江原日報	04면	道 '오색케이볼카·K-연어'로 글로벌도시 도약	23

강원도민일보	02면	폐광 앞둔 태백·삼척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청한다	23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국제규격 갖춘 빙상장 유치 나선다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 마땅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회 '행정감사' 역할 주지해야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자치도 '대학전담기구' 설립에 거는 기대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벼 수매가 안정화 대책, 정부가 나서야 한다	27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제안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이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2023년 제8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지급기준 통일하라”

시도회의의장협 임시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속보=지역별로 제각각인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본보 5월31일자 4면 보도)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에서 제기됐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제안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이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2023년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

전명예수당을 상향 통일해 모든 참전 유공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자치단체별 수당 지급액은 강원 6만원을 비롯해 전북 2만원, 전남 3만원, 서울 15만원, 제주 22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강원자치도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역별 지급기준도 상향 통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

했다. 권혁열 의장은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임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모든 참전유공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조길연(충남도의회장)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 금액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3면



시도의회의회장협 참전유공자 수당 통일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의회가 건의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을 가결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북 2만원, 강원 6만원, 제주 22만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다.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시도의장협의회 '지역별 천차만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적게는 매달 2만원(전북)에서 많게는 22만원(제주)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통일해 모든 참전유공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을 위해 참전 명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역별 지급기준도 상향 통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실질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 의장은 "목숨을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모든 참전유공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예우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뉴스쑈, 신한뉴스 등 42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1면

ESG 실천, 폐광지역을 '신에너지역'으로

<에너지+지역>

본지 주최 'ESG페스타' 성황

미래산업도시 성장 공감대 형성

폐광지역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대체산업 마련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ESG 실천으로 새로운 '에너지역(에너지+지역)'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강원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민회중앙회, 정선군, 정선군의회, 폐광지역 시·군이 후원한 ESG페스타 '그린 허브! 글로벌 강원'이 15일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윤명식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특임부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전영록 전국이통장

협의회연합회장, 지역기관·단체장 수장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본행사에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공헌에 나선 삼표(대표 배동환·삼척), 휴젤(대표 한선호·문형진·춘천), 강원남부주민(주)하이원SC 등 ESG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최승준 군수는 환영사에서 "ESG행사가 폐광지역 기업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초석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부지사는 축사에서 "폐광지역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

면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창수 부의장은 "폐광지역에서 ESG 행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기업에 전파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명식 특임부회장은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만큼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이 열악한 폐광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이 요구된다"며 "ESG 실천을 통해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에너지 활력이 넘치는 '신에너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유주현·정우진

▶ 관련기사 6면·상보 20일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1면

전국 곳곳 메가시티 광풍 강원특자도 전략 흔들리나

여권발 서울메가시티 구상 대응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지원 촉구
경기 택지 조성 '반도체 신도시'
'강원 외톨이론'·특구 지정 우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發)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경기도 오산·용인·구리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주택정책까지 발표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호남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강원도 외톨이론'까지 제기,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응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13일 메가시티 충청시대'를 선포,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의 연대 이후엔 곧바로 광주시가 전남·북에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구상 논의를 제안했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촉구했다.

김포에 이어 하남, 구리, 광명 등 서울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15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강원권 전국패광지역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수상업체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윤영식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특임부회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승준 정선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말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에선 구리 토평(1만8500호), 오산 세교(3만1000호), 용인 이동(1만6000호) 3개 지구가 추진된다. 오산 세교와 용인 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라는 점에서 '신도시 빨대효과'가 팽창될 전망이다.

이같은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구상 속에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상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 외톨이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충청권과 대구·경북, 호남권, 부·울·경 등 광역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추진 속도전을 위한 최대규모의 특례관청과 국제학교 유치, 접경·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은·김덕형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3면

江原日報

“파견 공무원 8일만에 도청 복귀… 道 인사 신중해야”

도의회, 행정국 감사 “출자출연기관 업무 하찮게 본거냐”

파견 인사 50명 중 26명 6개월내·14명 3개월내 복귀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강원자치도청에서 출연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8일 만에 다시 도청에 복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인사를 당부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15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류인출(원주) 의원은 “김진태 도정 들어 50명이 파견을 나갔는데 26명이 6개월 내 복귀했고 그 가운데 14명은 3개월 내 복귀였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한 달 만에 복귀한 직원도 있고, 8일만 근무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다”며 “그 기간이면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인사 자체를 잘못했거나 출자출연기관 업무를 하찮게 본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길탁 행정국장은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사 발령) 3개월 미만 직원 교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행정국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끝난 이후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가 미리 이뤄져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최승순(강릉)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과 환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성운(삼척) 의원은 “지급이 불가능한 통일교육단체에 보조금 4,000만원이 지급됐다. 도교육청 내 보조금심의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025년 전편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현재 64% 정도만 준비된 상태라고 지적한 이승진(비례) 의원은 “대학 연계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기호(철원) 의원은 “춘천, 원주, 강릉권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그외 지역의 경우 구매량이 매우 저조하다”며 지역과 협력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용래(강릉) 의원은 “수험표 확인 이벤트 때문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농수위 감사에서 강정호(속초)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2018년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끝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점검 결과 면세유 카드 양도 등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부정행위가 12건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11월 15일 (수)

강원

이승진 강원도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평가해야”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승진 도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보고서가 없으며, 정책 추진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숙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공 사례 등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3년 11월 15일 (수)

중부뉴스통신

지역

이승진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도교육청에 사업 관련해, 적극행정 주문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이승진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사업 점검 실시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은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등 도교육청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교원 수급, 교육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 시급성,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준비완료가 64%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양한 과목을 담당할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도교육청에는 이미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잘 관리 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달라"며 당부했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살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며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미 실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작은학교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로 중심을 잘 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적극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엔사이드, 명성일보 등 31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3면

“신경호 지지단체 지급 보조금 철저히 환수해야”

도의회, 도교육청 행감서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경호 교육감 후보 당시 신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일일이 규정 검토를 다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급한 보조금의 철저히 환수를 당부했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도교육청이 A통일교육단체 지원비로 4000만원 등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A단체는 신 교육감이 후보 시절, 신 교육감 지지를 표명했던 단체다. 교육청은 보조금 사업 공고를 띄우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조 의원은 “규정을 검토를 안하면 직 무유기가 아니냐”며 “철저하게 (보조금) 환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단체에서 그걸 (규정을) 간과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다”며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는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조성운

김시성

류인출

조 의원은 ‘전자철판 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계된 교육청 정책협력관이 A단체 관계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협력관이 무엇이길래 직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느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은영 원장은 “서비스원 운영은 국비와 도비 매칭 문제가 있다. 도와 협의없이 정부안에서 빠졌다”며 “국회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행정국 행감에서 도청 파견 인사와 관련 “김진태 도정에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56명 가운데 26명이 복귀를 했고, 그중 14명은 3개월만에 복귀했다. 올 7월에는 8일만에 복귀한 직원도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화

2023년 11월 15일 (수)

중부뉴스통신

지역

조성운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 지적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전액 환수 조치 당부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조성운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 지적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에 문제점이 있음을 질타했다.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 및 정산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이 불가능한 통일교육단체에게 보조금이 매년 4천만 원씩 지원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액 환수가 결정된 이후, 현재 환수가 전액 완료되었는지” 물었으며 “전액 환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을 맡을 민간 단체 공모를 통해, 해당 단체에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인 4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단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신경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단체로 판명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분의 전액 환수가 결정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의 단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철판으로 거론된 인물이 이번 보조금 관련해, 또다시 거론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관실을 비롯해, 조직 구성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건의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운 의원은 “해당 인물로 인해, 도교육청 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에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책임지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덧붙였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엔사이드, 케이엠뉴스 등 9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15일 (수)

亞洲經濟

지역

김기하 의원 "도내 교육지원청 별 화재·지진 대피 훈련 태부족"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23 17개 교육지원청 지진 대피 훈련 미 실시 - 연말 전국 훈련 기간 중 전체 교육지원청 일정 몰려 있어 (교육청 "추가 훈련 일정 조사해 추가 제출하기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진 대피 훈련을 한 교육지원청이 전무하다"며 "올 들어 동해안 지역의 잦은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재난 피해 예방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대피 훈련 역시 17개 교육지원청 중 8개 지원청이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교육청의 안전 대비 훈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지 등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10월말부터 실시된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난 대비 훈련은 안전관계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며 대응 매뉴얼 숙지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연말 몰아치기식 훈련이 아닌 상시적 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제진역 평화통일 교육의 진행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제진역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그동안 연 3억원 가량의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제진역 교육시설을 유지해왔는데, 고성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전체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국장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진역 평화교육 시설 전체가 고성군으로 이관하게 된다.

아주경제=춘천=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2023년 11월 15일 (수)

신한뉴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도내 교육
지원청 별 화재·지진 대피 훈련 태부족”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23 17개 교육지원청 지진 대피 훈련 미 실시

고태우 기자



▲ 김기하 의원(동해 2)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진 대피 훈련을 한 교육지원청이 전무”하다며 “올해 들어 동해안 지역의 잦은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재난 피해 예방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대피 훈련 역시 17개 교육지원청 중 8개 지원청이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원교육청의 안전 대비 훈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지 등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10월말부터 실시된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재난 대비 훈련은 안전관계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대응 매뉴얼 숙지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연말 몰아치기식 훈련이 아닌 상시적 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진역 평화통일 교육의 진행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제진역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그동안 연 3억원 가량의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제진역 교육시설을 유지해왔는데, 고성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전체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국장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진역 평화교육 시설 전체가 고성군으로 이관하게 된다.

명성일보, 누리일보 등 32개 언론사 보도

엄기호 강원도의원, "교육청,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적극 구매해야"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2)이 강원도교육청에 지역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계약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엄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구매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 구매량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농공단지 생산 물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엄기호 의원은 "이 문제야말로 적극 행정의 대상이다"며 "지역과 협력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엄기호 의원은 도민들에게 강원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후 도교육청 정책의 주민 대상 홍보가 정책 성패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김상혁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는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소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2023년 11월 15일 (수)

시사일보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 “교육청 농 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야”

전영선 기자



▲ 엄기호 의원(철원2)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권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구매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그 외 지역의 경우 구매량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엄의원은 농공단지 생산 물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봉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실무진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엄기호 의원은 이 문제야말로 적극행정의 대상이라며 지역과 협력하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도민들에게 강원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역 소재 로컬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도교육청 정책의 주민 대상 홍보가 정책 성패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김상혁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지역 로컬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는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소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도일보, 미디어이슈 등 33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강원 3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 유통 12건 적발 ..."단속 강화해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공급하는 면세 유류가 강원 지역에서 최근 3년간 12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행위는 2021년 6건, 2022년 5건, 올해 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 사유는 면세유 카드 양도·양수,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신고 기한 초과, 면세유 카드 거짓 발급,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 등이다.

현행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 유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가격표시 적정성 등을 1년에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2018년 8월 점검을 끝으로 수년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면세 유류 부정 유통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3년 11월 15일 (수)

문화매일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강정호 의원,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강정호 도의원, 22년 행감에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 미점검” 지적

이등원 기자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				
□ 점검근거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점검개요				
○ 점검주체 : 도 또는 시장·군수				
○ 점검시기 : 연2회				
○ 점검대상 : 18개 시·군 면세유류 판매업소				
○ 점검방법 : 시·군별 판매업소 전수조사				
* '23년 하반기 : 판매업소 10% 내외 또는 농관원 합동점검 추진				
○ 점검내용 : 가격표시 적정성, 부정유통 의심사례 등 조사				
□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22년 ~ 2023년 / 3회				
점검연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내용	비고
2022년	11.10.~11.30.	18시·군 929개소	가격표시 적정성,	
	05.25.~06.23.	18시·군 948개소	부정유통 의심사례 등	
2023년	11.08.~12.08.	*		
* 조치결과 : 가격표시 미추진 판매업소 부착 등 계도 등				
○ 세부 점검결과				
연도별	시·군	적발건수	세부 위반 사유	
2021 (6건)	춘천시	1	농기계 신고기한(30일) 초과	
	원주시	2	농업용도로의 사용, 면세유카드 거짓(부정) 발급	
	강릉시	1	농기계 신고기한(30일) 초과	
	삼척시	2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춘천시	2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2022 (5건)	인제군	2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	
	양양군	1	농기계 신고기한(30일) 초과	
2023 (1건)	양양군	1	농업용도로의 사용	

▲ 강정호 의원,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은 11월 14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해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강 의원은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는 이후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정호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소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1회 23년 상반기 1회 점검 후, 현재 하반기 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총 12건으로,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순이었다. 세부 위반 사유로는 면세유(카드) 양도·양수가 가장 많았으며, 농기계 신고 기한(30일) 초과, 농업용도로의 사용,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청, 면세유 카드 거짓(부정) 발급 순이었다.

면세유의 농업용도로의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 의원은 “농민들의 영농부담 해소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적정성 및 부정유통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서 점검 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했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춘천MBC

2023년 11월 15일 (수)

강원

강원도에서 면세유 부정 사용 12건 적발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면세유를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건수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를

농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거나

면세유 카드 거짓 발급,

다른 사람에게 면세유 카드를 넘기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12건 적발됐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도와 시군이

면세유 부정 사용을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점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mbc05@chmbc.co.kr

뉴스쑈, 명성일보 등 31개 언론사 보도



도의회,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자치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MBC 강원영동

2023년 11월 15일 (수)

강원

강원문화재단 직원 이직 심각, 처우 개선해야

홍한표

강원문화재단 직원들의 이직이 심해
강원도의회가 채우 개선을
시급하게 고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강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릉의 심오섭 도의원은
연봉 3천만 원 이하 직원이 14명에 달하고,
2021년 이후 재단 현원 51명의
절반 이상인 30명이 이직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속초의 김시성 도의원도
최근 3년간 재단 내 '직장갑질'이 3건 발생해
직장 내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

강원

‘개청 100일’ 강원 글로벌본부 “현안사업 실질 성과 주력”

앵커

지난 7월 강릉에 들어선 강원도청 2청사, 이른바 '글로벌본부'가 문을 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글로벌본부는 앞으로 영동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6월 폐광 예정인 태백 장성광업소입니다.

800명 넘게 일자리를 잃고, 3조 원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2천25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도 문을 닫게 돼, 연쇄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급격한 고용 악화 등에 대비해 강원도 글로벌본부는 우선,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최진현/강원도 자원산업과장 : "(일자리 관련)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은 도비라든가 시비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지역 지정시)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다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에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해, 1조 원 이상의 국비를 대체 산업 육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청 100일이 지난 글로벌본부는 이렇게 폐광에 따른 희생과 수소 에너지 육성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일섭/강원도 글로벌본부장 : "(내년에는) 분야별 비전과 전략 수립, 또 발표 등을 통해서 주요 사업들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국, 11개 과로 구성된 2청사는 현재 2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서 외에 현장 인력도 2청사로 집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오섭/강원도의회 의원 : "조직 정비를 다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원화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하나로 묶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초 계획한 2청사 부지사 체제를 위해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자치조직권 특례도 넣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기피 지역이 되지 않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지원 강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글로벌본부는 2청사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직원 복지 향상과 신청사 건립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정면구 nine@kbs.co.kr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인물동정 21면
◇김용래도의원(강릉)은 16



일 오전 7시40분
강릉제일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
험생들을 격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동정]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6일 오후 3시 원주문화원 공연장.전시실에서 열리는 민공호의병대
장 북콘서트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사회

[동정]김용래 도의원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16일 오전 7시40분 강릉제일고 정문 앞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응원, 격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경제 07면

“중기 협동조합 활성화 지자체가 나서야”

중기중앙회-김진태 지사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김기문 중양회장, 최선운 강원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최성규 강원중기청장 직무대리, 박승균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홍식 강원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모범 외국인근로자 포상제도 마련’,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등 적극 활용’, ‘농공단지 생산품 수의계약 시 현장확인 절차 개선’ 등 각종 현안을 건의했다.

최선운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



◇중소기업중앙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초청 간담회가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 지사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선운 강원중소기업회장, 최성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과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안 해결 한 목소리 김 지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지만, 일선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높이고,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다변화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승균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공동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동조합 추천제도’가 있지만 인식부족, 감사부담 오해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원자치도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물

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어렵다”며 “이럴때 일수록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99.9%에 달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큰 축”이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규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1면

세수 부족한데...설상가상 악성 체납 517억

〈지방세〉

도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역대급 '세수 핑크' 속에 악성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 4조7,000억원, 강원지역은 517억원에 달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역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1,113명, 총 체납액은 517억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올해 1월1일 기준 신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156명(체납액 74억6,300만원), 지방행정제

최고액 '원주 법인' 5억여원

1천만원 이상 1,113명 달해

당국 재산추적 등 강력 대응

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4명(4억원)이었다.

소액 체납까지 모두 포함하면 강원지역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99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원주의 법인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건, 총 5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의 경우 현재 대전에 주소록을 두고 있는 50대가 춘천시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종합소득) 2억5,000만원가량을 체납 중이다.

전국의 경우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33명으로 총 4,507억원이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기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이 59조

원, 강원자치도의 경우 4,7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10%가량의 결손이 상습적인 체납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이무현·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2면

도내 고액 상습 체납 1,113명 -1면에서 계속

강원자치도 역시 15일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산 추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송립 강원자치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사회 04면

道 '오색케이블카·K-연어'로 글로벌도시 도약

오는 20일 오색삭도 착공식·비전선포식 동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가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과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을 동시에 개최하며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한다.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이날 오후 2시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오색리 466)에서, K-연어 비전선포식은 오후 3시30분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

(남문리 226-2)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일섭 도글로벌본부장은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두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착공식은 1982년 최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 2015년 최초 설계 시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지

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재설계 시 물가 상승 영향으로 1,172억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만으로 조기 준공해 연간 약 1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은 아시아 최대·최고의 연어산업의 중심

지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대서양연어 완전양식 기술 및 수정란 수입에 성공했다. 또 (주)동원산업 연어양식 산업단지 승인, 연어 연구 테스트베드 조성, 연어 질병 국가 연구시설을 유지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상양식단지는 내년 봄 착공하고 2025년 대서

양연어를 출하할 예정이다. 두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어서 기쁘다"며 "연어산업화를 통해 60조원 가치의 연어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릉=최영재기자

2023년 11월 16일 (목)

종합 02면

강원도민일보

폐광 앞둔 태백·삼척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청한다

지역 2곳 실업자 2561명 전망

5년간 경제 피해 예상액 9조원

각각 내달·내년 2월 신청서 제출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기 폐광을 앞둔 태백시·삼척시에 대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추진, 폐광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태백 장

성광업소는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는 2025년 6월 폐광한다. 태백과 삼척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며 지역 존립이 흔들리며 경기 침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백과 삼척지역 광업소가 폐광하면 두 지역의 실업자는 총 256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역총생산 감소 규모는 태백시가 13.6%, 삼척시가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간 경제 피해 예상

액은 각각 3조 3000억원·5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이어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이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고용촉진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5년간 연간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관련 협의를 마친 후 다음 달 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강원도는 두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내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대규모 휴업·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 시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1조원 규모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내 태백·삼척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폐광지역 석탄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이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2023년 11월 16일 (목)

지역 09면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국제규격 갖춘 빙상장 유치 나선다

내달 문체부 공모 도전장

국비 지원액 1500억원 추산

송암스포츠타운 대상지 거론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도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빙상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쯤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을 대신할 새로운 빙상장 건립 공모 사업에 나선다.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태릉국제스

케이팅장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1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춘천시는 해당 사업의 경우 100% 국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춘천의 경우 송암스포츠타운 일대가 빙상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빙상장 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이다.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빙상장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육동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중 하나다. 최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에 성공한 춘천시는 빙상장 건립 공모 통과,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

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육동한 시장이 직접 태권도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빙상도시 춘천의 강점을 소개했다.

지자체들과의 경쟁도 쟁점이다. 현재 의정부,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는 전철과 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인접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더욱이 1934년 춘성군체육협회 주최 빙상경기, 1962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우두강 빙상대회 등 춘천이 빙상과의 인연이 깊다는 점도 장점이다.

빙상장 조성 계획 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다. 춘천시 관계자는 "저수지 부지에 고인 물만 제거한다면 토양 매립 작업 필요 없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만 된다면 선수들과 그 가족들이 춘천시로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육동한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춘천이 가진 빙상에 대한 전통성, 역사성을 원상회복 시키는 과정"이라며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사설/칼럼 19면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 마땅

-관련 교부세 지역별 자율분배 신중해야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을 구조하는 강원 소방관들이 업무 중 부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는 공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단체보험료 일부를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소방안전 교부세가 '자율분배'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우려가 큼니다. 지역별 임의의 분배할 경우 소방관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치료 대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부상에 따른 보장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단체보험 등 안전 예산은 우선 확보해야 할 항목입니다.

강원 도내 소방관 공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화재·구조·구급 상황 등에서 부상을 입은 공상자는 총 42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강원도 소방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4060명 중 3539명이 이상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원주 식품공장 화재진압에서도 구조대원 1명이 추락해 골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업무 특성상 소방관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 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관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14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납부하고, 일부를 강원도에서 지원합니다. 단체보험료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10곳에 이릅니다. 타지역에 비해 소방관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소방관 처우 개선에 쓰이는 '소방안전 교부세'를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분배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 소방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사용해왔습니다. 자율배분이 실행되면 소방관들의 업무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선 소방 공무원들은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인 소방안전 교부세 비율 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시민들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고민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6일 (목)

사설/칼럼 19면

의회 '행정감사' 역할 주지해야

-자료청구 증가바람직, 유착 및 편법 밝혀 집행기관 바르게 가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도 실국 및 산하기관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이 뉴스 중심에 올랐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감사에서는 이무철 도의원이 적자 추산액이 900억원대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을 따졌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진중호 도의원은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느슨한 업무를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망상 2지구와 3지구 기업 투자 진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업의 투자 실패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특정업체 의혹과 실질 투자 가능성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우려되는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확일적 전자철판 교체에 대해 조성운 도의원이 현장 의견이 엇갈리고 철판 업체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집행 중지를 주문했습니다.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14일 안에서만 실시하게 돼 오는 21일까지는 도의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기간입니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작년보다 200여 건 늘어난

1400여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청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업무와 관련한 의정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긍정적입니다. 증가한 양만큼 관련 내용을 치밀하게 파악해 예리하게 지적해 내실 있는 감사가 돼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보유한 조례 결정, 예산 의결, 질문권과 함께 핵심 기능에 꼽힙니다. 집행기관이 탈법과 편법으로 지방행정 효율성을 저하하거나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지 감독하고 비판,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2011년부터 감사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난 것도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 촉구해야 지방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매일매일 의원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감사 이후 후속 조치 사항은 철저히 관리해 주민과 교감해야 합니다. 의회감사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인 평가야말로 지방의회 존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미 감사 일정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뉴스 중심에서 길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자치도 '대학전담기구' 설립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대학전담기구'를 설립,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대학별로 1,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글로벌대학에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도내 2개 대학이 선정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지역 대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는 없으며 지역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지방비 5,170억원을 비롯해 1조8,000억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키로 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가 발전하고 '수도권 중심-지역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 대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전담기구' 설립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즉, 도는 내년 하반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센터로 지정하고 산하에 대학전담사업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TF를 가동하며 하반기에 센터 설치를 마친다. 설치 단계부터 전문인력을 배치해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본격 운

영은 2025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대학은 지식의 집합체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역의 대학은 위기의 단계를 넘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다.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 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학전담기구' 설치의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강원특별

도내 2개 대학 글로벌대학 선정 계기

향후 5년간 지방비 등 1조8,000억원 투입

재원대책 마련, 전문인력 배치 등 내실 기해야

자치도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이다. 향후 5년간 지방비 5,170억원을 무슨 방법으로 조달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세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재원 대책 없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주민들의 기대 수준만 높여 놓고 허사로 돌아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원 대책이 없는 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대학 성장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 큰 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일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게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6일 (목)

사설/칼럼 19면

벼 수매가 안정화 대책,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벼 농사가 풍년을 기록했지만 농가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벼 수매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쌀(백미, 92.9%) 생산량은 14만9,712톤으로 지난해보다 4%(5,804톤) 증가했다. 문제는 수매가다. 철원농협은 9월 올해 쌀 수매가를 지난해 1kg당 2,040원보다 190원 낮은 1,850원으로 결정했다. 철원지역 쌀 수매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동철원농협과 김화농협 역시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수매가를 책정했다. 화천농협은 다음 달 중 수매가 동결 또는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벼농사 의존 비율이 높은 농촌의 경우 수매가 인하는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풍년이면 쌀 수매가가 폭락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풍년이 되면 되레 농민들의 근심은 더 해진다. 자식처럼 키운 쌀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수매가 하락의 최대 원인은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연평균 재배면적 감소율은 1.8%이나 1인당 소

비량 감소율은 2.5%다.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큰 상황이다.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팔면 팔수록 적자만 커지면서 농가는 더욱 곤궁해지고 지역농협은 부실해지고 있다.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농협도 늘고 있다. 전년도 적자를 보전하기에 급급한 탓이다. 농가와 농협의 어려움을 해소할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쌀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도내 쌀 재배면적은 2만8,335ha로 전년 대비 1.3%(373ha) 감소했다. 정부와 강원자치도 등이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 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량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인건비, 기름값, 농약·비료비용 등은 거침없이 오르는 데 정작 쌀값은 내려가고 있다. 농사를 지을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속되는 쌀값 하락은 잘못된 정책과 운영에 기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이상 쌀값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농민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지역 농협과 농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